

# TABLE OF C.o.n.t.e.n.t.s.

종교차별이란 무엇인가 ... 4

.....

한국현대사에서 종교차별의 흐름 ... 6

.....

기독교 근본주의, 사회갈등의 뇌관되나 ... 15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 ... 15

한국의 개신교근본주의 ... 17

한국사회, 심화되는 신정일치적 움직임들 ... 19

.....

종교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 22

헌법적 측면 ... 22

사회통합의 측면 ... 25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 ... 26

.....

이런 것이 종교차별 ... 28



## 종교차별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면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로 나눈다.

- **적극적 자유** :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포교의 자유
- **소극적 자유**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개종외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 탈퇴의 자유

이중에서 소극적 자유는 어떤 이유로든지 침해당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에 속한다. 대법원이 대광고 강의석군 종교자유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학교가 행사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듯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충돌하면 소극적 자유가 더 우선시 된다.

정교분리란 서구사회가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나 투쟁으로 빚었던 수많은 종교전쟁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남긴 교훈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규정이 미비하긴 하지만 근대화의 큰 흐름을 따랐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차별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정교분리를 위배한 사건 외에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편협, 타종교에 대한 공격 등의 사건도 적지 않았다. 이 또한 종교평화와

사회통합을 현저히 해치는 사례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헌법위배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종교차별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

### 유형 1

#### 헌법 20조 2항 '정교 분리'를 위배한 사례

ex) 2011년 초, 개신교계의 요구로 이슬람채권법인 '스쿠 크법'의 국회 통과 좌절된 사건, 국가조찬기도회5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통성기도한 사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유형 2

#### 헌법 20조 1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ex) 대광고 강의석 군이 학내 예배 강요에 불참하여 제적당한 사건. 5년여에 걸친 끈질긴 소송 끝에 2010. 4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사학은 종교자유 침해가 가장 잦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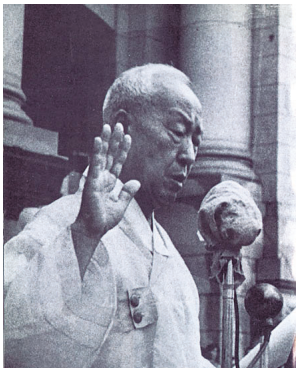
### 유형 3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훼손, 타종교를 폄훼한 사례

ex) 최근에는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특정 종교인에 입학 특혜를 주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서울여대(목회자 추천) 92명, 명지대(크리스찬 전형) 70명, 한동대 목회자 자녀 65명 등 1천여명이 종교 특례로 일반 학과에 입학했다. 교육의 평등권,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아직 여론화 되지 않았다.

## 한국현대사에서 종교차별의 흐름

### ‘기독교국가’를 꿈꾼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개신교 근본주의자이자, 정교일치주의자였다. 그는 미군정에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개신교에 솔한 특혜를 주며 개신교가 해방이후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정교일치적 문화와 관행, 종교단체에 대한 솔한 특혜와 정교유착의 씨앗은 모두 이승만 정권 때 뿌려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은 종교적산의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불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가 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루는 관례를 만들었다. 또한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냈고, 형목제도와 군목제도의 기독교 특혜, 기독교방송국과 극동방송국 설립 허가 등 솔한 특혜를 제공하여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성장토록 하였다.

### 적산불하, 원조물자 배분에 기독교계 특혜

미군정은 적산 관제처장에 조선 최초 신학박사인 남궁혁을 임명하여 일본 교회·천리교·신사 등 일본종교관련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 사찰 나아가 병원·주재소·농장·임야·대지·가옥 등 일반 적산도 주로 개신교 측에 제공

하였다.

천리교본부가 있던 동자동에는 조선신학교가 창설되었고, 가장 큰 천리교회가 있던 저동에는 영락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다. 남산에 있던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는 기독교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그밖에 각 지방의 YMCA건물, 학교 등 엄청난 규모의 적산이 특혜로 제공되었다.

1950년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원조물자 배분에 간여케 하여 한국전쟁 직후부터의 ‘교회건축붐’을 가능케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방이후 1956. 8까지 장로교 1,200개 소, 감리교 500개 소, 성결교 250개 소 등 무려 2,050개 소의 교회당이 신설되었다. 한국전쟁 때에도 원조물자 독점은 이어져 개신교계는 1957년 현재 사회복지기관 539개소(수용인원 63,787명)를 운영했다. 1957년 연간 300만 달러에 달하는 종교단체원조금을 개신교 교회에 대부분 제공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 박정희의 노골적 기독교 선교지원

박정희 정권은 친불교적으로 기억되는 것과 달리, 기독교 우대 정책을 취하였고, 민족문화와 종교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반공주의적 성향이 뚜렷한 개신교와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했던 군사정권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가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제1회 대통령조찬기도회는 1968. 5. 1 워커히 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개신교계인사, 정계중진, 사회유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개최됐고, 이 해부터 매년 5월초에 연례행사로 계속됐다. 유신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1973. 5 제6회 대통령조찬기도회는 TV로 실황중계 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조찬기도회가 연례행사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여러 형태의 조찬기

도회들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재정을 전담하던 기독교실업 인회가 나서 “지도자 및 지방장관 조찬회”를 실시하는 등 국가와 종교의 유착에 앞장섰다.

정부지원으로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세계적 유례가 없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실시되어 군대 내에서 개신교세는 배타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전경신자화운동’, ‘전국교도소신자화운동’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도 파급되었다. 개신교는 국가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사상 유례없는 교세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불재법을 활용해 통제하였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서낭당과 장승 등 전통문화는 무차별하게 파괴되었다.

전군신자화 운동은 군대 특유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강제적 방식들이 동원되었다. 이 운동에 따라 군장병 중 종교인구의



▲박정희는 전군신자화운동으로 개신교 선교를 도왔다. 사진은 합동세례식 장면.

을 차지했고, 천주교는 13.2%, 불교 4.3%에 그쳤다.

비율은 1970년 20%, 1971년 33%, 1972년 44%, 1973년 48%로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군신자화운동’으로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세 종교 전체 입교자 145,818명 중 개신교가 82.5%로 대부분

## 국가조찬기도회로 정당성을 얻고자 한 쿠데타 주역들

1980. 8. 6 바로 전날 대장으로 진급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 위원장을 지지하는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 기도회는 당일 KBS와 MBC가 생중계하였고, 관련 일간지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날 정진경 당시 성결교 중경총회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이 행사 직후인 8월27일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개신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9월30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전두환 정부 역시 대대적으로 개신교계를 지원했다. 1980년 ‘80세계복음화대성회’를 위해 정부 관영매체에 특혜 광고를 제공하였고, 공병대를 동원하여 무대를 설치하는 등 노골적 정교분리가 행해졌다.



▲전두환 정권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장면. 오마이뉴스.

## 김영삼 대통령, 개신교계 선거지원 보답으로 각료 중용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던데, 취임 이후 거침없이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정권 초기엔 매주 김장환 목사나 조용기 목사를 불러 청와대 예배를 주관케 했다. 2년

제 무허가 신학대학 대부분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도 이때였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요직에는 기독교계가 대거 기용되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내각의 각료 가운데는 개신교인 13명, 천주교 4명에 비해 불교는 겨우 2명만이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려대로 당시 황산성 환경부 장관은 정부청사 내 식당에서 근무시간에 예배와 기도모임을 가져 물의를 빚었다.

또한 권영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군 의전서열 1위에서 10위 이내의 대장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삼 정부 때에 종교차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 90년대 들어 성시화운동 신정정치 움직임 시작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반공과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보수 개신교 세력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거대세력으로 성장한 보수개신교계는 정권지지를 대가로 이익을 얻어내던 기존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벗어나 권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기독교정당 창당 움직임이 이 시기 본격화되었고, 종교적 기반 하에서 출발한 뉴라이트와 같은 정치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흐름은 성시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김준곤 목사에 의해 기독교국가화를 목표로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었는데 2004년 비로소 알려졌다. 더불어 지역 기관장과 유지, 목사들의 인적 네트워크인 홀리클럽도 이 시기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개신교 성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제주성지순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2000년 영광군이 교회 '순교비' 건립, '염산 기독교순교지 명소화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순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독교 성지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신교계의 전통문화에 대한 도전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 5 경기도 여주군에 소재한 3개 초·중학교에서 단군 좌상의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되었다. 한기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공공시설 내에 단군상을 설치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는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각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다.

숫대와 장승 등 전통문화도 수난을 당했다. 1999년에는 전남 함평군이 조상한 장승 199기와 숫대 99기, 돌탑 4기 등이 수난을 당했고, 강릉 단오제, 전통 진혼 굿, 정월대보름 액막이굿, 용산공원의 용오름상, 태백산의 천제단 등 전통문화의 상징들이 모두 개신교계의 반대로 철거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주 원명선원의 불상 1천구가 훼손 되는 등 사찰 내 훼손도 잇따랐다.



▲제주 원명선원의 훼손 현장.

## 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종교차별 행위 폭발적 증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교분리 위배 행위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공직자들이 정교분리를 명시한 우리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내 주었다.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를 표방하였다.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보수 개신교계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0. 11 한기총은 산하에 개신교 은행설립 추진 기구를 만들어 “기존 은행을 인수하거나 새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조 5천억원 규모의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은행추진위 측이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소형교회 지원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산재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조차 이런 순기능보다는 은행 설립 시 대주주가 될 대형교회의 자본 활용도가 증가하여 교회 대형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꿇고 통성기도를 올린 사실은 나라가 논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개신교는 국가의 통상적인 경제행위에 대해서까지 배타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이슬람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입법추진중인 이슬람 채권법 도입과 관련하여 2011. 2 국회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침투와 테러자금조달이라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며 거세게 반대하였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운동”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2월 국회에서 ‘수쿠크법’ 도입이 무산되었다.

### 교육의 기회 균등 무너뜨리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는 교육 평등권 침해 소지가 커 앞으로 큰 갈등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학생선발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47개 대학이 2만여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로 뽑았다. 그런데 개신교 사학인 서울여대는 2009. 7. 10 대학 홈페이지에 낸 입학사정관 모집 공고에서 지원 자격 중 하나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에서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소관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에 응시하고자 하는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정 종교인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되는 학생들 또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종교 또는 타종교인 학생들의 진학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밖에 종교사학이 특정종교인으로 교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과 2010년 시정을 권고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2010. 11 교직원 채용시 종교 제한 금지 지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다수의 종교 사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인 채용 제한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부터 ‘기독교 성지순례 붐’을 조성하였던 기독교계에 화답하듯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기독교유적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애매한 많은 기독교 유산들이 별다른 제도 없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반면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국보급 마애불을 훼손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매장되어 있던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유적지들은 파문혀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난 또 하나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교분리 위배 사례가 폭증한 것이다. 수도권과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광역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만 50여건이상의 정교분리 위배 사례가 지자체에서 발생하였다.

2011. 3 ‘사랑의 교회’가 편법공사 위해 서울시가 도로위치를 바꿔 준 것이나, 2008. 1. 26 안산수 인천시장(교회 권사)이 성시화운동 법인설립 감사예배에 인천시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천은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성시화운동을 적극 지원한 것, 경기도 남양주시가 2008년 시목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나, 2008년 안산시가 ‘민원즉심관’에 성시화운동본부 핵심 관계자를 임명한 것 등도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정교분리 위배사례가 폭증하였다.

## 기독교 근본주의, 사회갈등의 뇌관 되나

###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신정일치적 경향은 현대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알아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하더니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압승을 거두는데 일조하면서 미국 현대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은 2000년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도 위력을 발휘하더니 2004년 부시 재선에는 그야말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당시 알카에다와의 '테러와의 전쟁'은 지지부진했으며, 법적 정당성도 대내외적인 명분도 없이 일으켰던 이라크 전쟁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미국 경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그의 재선에는 악재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근본주의 세력은 종교적 신념으로 부시를 지지했고 단단한 표의 결집력을 보여 주며 부시 재선의 일등 공신이 된다.

부시는 당선 후 노골적으로 백악관 참모진과 정부 내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낙태 합법화 반대, 동성간 결혼 허용 반대, 반(反)페미니즘, 줄기세포 연구 반대, 빈민층을 '나태'에 빠지게 한다는 이유로 한 사회 복지 예산 축소, 학교에서 종교 교육 강화 등 기독교 근본주의 이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다. 특히 백악관 내 '신앙공동체 정책 사무소'를 설치하여 이 사무소를 통해 종교 기관의 사회복지 활동에 매년 20억 달러(약 2조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개신교계에 노골적 특혜를 주었다.

오바마 때도 근본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8년 8월 당시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와 함께 근본주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새들백 교회에서 벌어진 토론회에 참석하여 신앙검증을 받았다. 오바마는 중간이름인 '후세인' 때문에 이슬람교도라고 공격 받았으며, 릭 워렌 목사도 청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설문결과 90% 이상이 여전히 오바마를 이교도, 사회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 들어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개입은 제3세계 원조 반대 등 보편성을 더욱 상실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종교와 신앙은 더 이상 개인적 양심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현상으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은 오바마가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면서 티파티 등의 극우 정치단체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정치이슈화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 온 수전 조지는 그의 저서 '하이재킹 아메리카'를 통해 "미국의 종교적 우파는 4M 즉, 자금(Money), 미디어(Media), 마케팅(Marketing), 경영(Management),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감(Mission)을 바탕으로 재단과 로비, 두뇌집단과 출판계, 정치거물과 법률가 및 활동조직들을 활용하여 미국사회를 효과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민주당에 의한 의회 교체에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했다. 이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들이 거부하는 정치 문화에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 탈환 이후 그의 예상은 사실로 드러났다.



▲ 미국의 개신교근본주의 단체인 티파티가 오바마를 탄핵해야 한다는 집회

##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오류, 예수의 신성(神性), 처녀 탄생, 대속적(代贖的) 구원,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再臨) 다섯 가지를 핵심 교리로 삼는데, 같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가톨릭·동방정교·개신교 계통 신종파에도 적대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유럽연합(EU) 등 국가 연합체도 적그리스도 집단이라고 공격한다.

이들의 일부는 통상의 보수주의자들이 과거 회귀 등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현대화에 대항하는 반면, 개혁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입법,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스스로 복음주의자로 부른다. 이후 근본주의는 복음주의자처럼 현실에 적극 개입하면서도 성향은 더 우경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

20세기를 전후로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들에 의해 개신교가 전해지면서 한국 개신교는 매우 근본주의적이면서 친미 반공적 성향을 갖게 된다.

1907년 평양대부흥회를 기점으로 개신교 신자수는 평안도와 황해도 포함한 서북 지역이 전체 개신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광복 직후 북한의 개신교인들은 우익 정치운동을 주도했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수많은 충돌을 빚으면서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대거 월남했으며 남한 개신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교회의 주류가 되어 개신교 내부의 여론을 주도했다.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반공에 기반한 근본주의적 성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그들에게 위기감을 갖게 했다.

1989년 결성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중심으로 2006년에는 ‘뉴라이트’와 ‘기독교 사회책임’ 등이 결성되어 각종 우익 정치집회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개신교 인맥은 청와대와 정부 내 요직에 대거 포진하였다. 또한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신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 경제, 사회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Again 1907”의 효시 - 1907년 평양대부흥회

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격전장이었던 평안도 지역은 전쟁의 참화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었다. 암울한 현실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였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박해가 덜한 미국 선교사들의 공간인 교회로 몰려들며 교세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07년 평양에서 일주일간 대부흥 집회가 열렸다. 마지막 날이 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자 길선주 목사는 교인의 돈을 가로챈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저마다 전쟁의 상흔들을 갖고 있는 청중들은 일시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열광적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성령체험’의 소식은 빠르게 외부로 전해졌고 곧 회개와 도덕각성운동이 벌어졌다. 바로 이것이 평양대부흥운동이다.



▲1907년 평양대부흥회. 출처 기독교TV.

90년대 중반 이후 양적성장이 멈춘 이후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경향은 세계 최초의 성시화운동 전개로 외화되었다. 성시화운동의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중세 제네바이고,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예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이는 장로교를 만든 존 칼뱅이다. 성시화 운동, 홀리 클럽 등은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꿈꾸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연출망



에 불과하다.

성시화운동을 비롯하여 기독교 운동, 반핵반김 운동 등을 펼쳤던 대형 교회 중심의 근본주의세력들은 2000년대 들어 서울 시청 앞에서 각종 정치집회를 개최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시청 앞 반핵반김 집회에 걸린 성조기와 태극기. 한국 개신교근본주의의 미국추종을 보여준다.

집회마다 등장하는 성조기, 심지어 목사가 한국인들 앞에서 영어로 기도를 하는 모습 등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의 미국 추종은 심각하다. 2010. 6. 22.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개최한 '6.25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에 퇴입한 조치 부시 前미국대통령을 간증 전도사로 세운 것이 극명한 사례이다. 1999년 국내의 개신교 신학대학 교수 500명을 조사한 결과 65%가 미국 신학교 졸업생이라는 보도가 있어 그 배경을 짐작케 한다.

## 한국사회, 심화되는 신정일치적 움직임들

### 기독교 정당 원내 진출 및 정치개입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2004년 '한국기독교당'이 창당되었고, 17대 총선(지지율 1.1% 득표) 결과 정당등록이 취소되었지만 2008년 1월 당명을 바꿔 '기독교사랑실천당'이 창당되어 그 해 총선에서 전국 2.59%를 득표하여 정당을 유지하고 있다. 기독교당은 정강정책, 비전, 강령을 통해서 정당활동의 목표를 신정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있어 헌법 20조 2항이 정한 정교분리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 기독교은행(제1금융권) 설립

한기총은 2010년 기독교사회복지은행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제 1금융권 기독교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금융설립위원회는 “기존 은행을 인수하거나 새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조 5천억원 규모의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의 경우 2002년 자본금 1조6천억원).

굳이 제1금융권의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론주도층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은행까지 설립하여 돈을 앞세운 근본주의세력들이 정치 언론 교육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노골적 개입을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교동협의회, 개신교 교도소 등

지방자치단체(행정)와 교회의 결합을 목표로 한 교동협의회는 2006년 성북구청 교동협의회가 알려진 후 잠시 주춤했다가, 2008년 이후 본격화되어 현재 전국 주요 지자체에 결성되었다. 도시에서(특히 수도권) 압도적인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계가 교동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내에 정교유착의 뿌리를 내린다면 향후 한국사회에서 정교분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0. 12. 1 한기총은 설립을 시도한지 15년만에 경기도 여주에 첫 종교교도소이자 개신교 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개원하였다. 설립비용은 개신교계가 모금으로 하였지만, 연간 운영비의 9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정교분리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직원채용시 교인 증명서 1부(종교가 있는 자에 한함) 요구, 수형자를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의 평등권 침해 여부, 수형자 선발 시 일반시설과의 형평성, 자원봉사자의 기독교 교육 이수 시 특혜 문제 등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 수형자의 종교자유 침해 여지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 역사·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기득권화 추진

2008년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역사왜곡으로 파장을 불러와 교과서 채택이 좌절되었지만, 한기총은 2009년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를 출범한 뒤 교과부 및 여러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안을 보냈다. 역사교과서의 기독교 왜곡 및 축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션스쿨 등에서 기독교를 우대하게 서술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말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 있던 출신국가, 가족형태,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7개 차별 사유를 삭제하여 발의하였지만, 개신교 근본주의 세력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차별금지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2010년 법무부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기독교계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광고, 집회 등을 통해 극렬 반대하였고, 결국 2010. 12 법무부는 18대 국회 회기 기간에 동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대학 신입생 선발에 대학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수시전형 모집에 특정종교인을 우대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 제도가 목회자 추천, 크리스찬 전형 등 특혜 제공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0년 입시에서는 1천명 정도의 학생이 종교적 특혜를 앞세워 일반학과에 입학했다.

이밖에 창조론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1987년과 2001년 2차례 시도했다가 좌절된 이후에도 2010년 1월 23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창립으로 다시 시작됐고, 땅밟기 전도 캠프,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운동 등 다방면에서 근본주의적 경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 종교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한 사회가 성숙하고 선진화되는 징표는 물질적 발전에 달려있다고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내면세계, 즉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폭넓게 존중되고 구성원들의 행복이 증진되는가에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차별 사건과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데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내부, 혹은 종교 간의 문제로 종교차별 문제를 좁혀 보기보다는 종교차별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여,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보편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1. 헌법적 측면에서

####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1항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가운데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결사·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않을 자유, 개종 자유 등 소극적이고 내면적 자유가 더 본질적이고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한국에서는 유독 종교단체가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유의 목소리만 높다. 그러다 보니 종교단체가 선교의 자유를 앞세워 개인의 내면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슬로바키아 헌법 24조 1항 : 국민은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룩셈부르크 헌법 20조 : 휴일에 종교행사에 참석·참관하도록 강요 받지 않는다.
- 일본 헌법 20조 : ② 어떠한 사람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런 폐해를 우려하여 종교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헌법에 못박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슬로바키아처럼 무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룩셈부르크나 일본처럼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단체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종교단체, 종교와 밀착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 부르카라고도 한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부르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종교의 자유’ 조차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고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선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의미의 종교자

유는 종종 제약이 있었던 반면, 개인의 내밀한 신앙의 자유는 제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종교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만큼 국가와 공공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종교의 특수성보다는 공공의 이익, 보편의 이

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말해준다.

###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통상 정교분리로 칭하는 이 원칙은 근대들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이라 할 수 있는 미 연방헌법은 “연방회의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수정 헌법 제1조)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와 교회가 결탁하여 공동체가 파멸하고, 종교가 타락했던 슬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창당한 한국기독교당에 이어 2008년 창당한 ‘기독교사랑실천당’ 역시 정강정책, 비전, 강령을 통해서 정당활동의 목표를 신정국가 건설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될뿐더러 세계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어쩌면 아래의 나라들처럼 헌법에 종교의 직접적 정치 참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 · 터키 헌법 제2조

터키공화국을 “법률에 따라 통치되고, 공공의 평화와 국민통합 및 정의를 유념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전문에 규정된 근본정신에 기반을 둔, 민주적이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국가...”

### · 포르투갈 헌법 제51조

정당은 특정 종교 또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 또는 국가나 종교의 상징과 혼동될 수 있는 표상물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멕시코 헌법 제130조

“성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단결하거나 정무직 후보, 정당,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설교할 수 없다. 어떤 종파와 관련된 단어나 기타 표시가 명칭에 포함된 정치단체의 설립은 엄격히 금지된다.”

· 일본헌법 제20조 / 89조

제20조(神敎의 자유 및 국가의 종교활동 금지)

- ① 신교(神敎)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  
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II.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해방이후 친기독교 정책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천주교, 개신교 등 서양종교와 유교, 불교 등의 동양종교가 서로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종교지형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종교학계에서 등장한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라는 개념이 가장 절실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학자들은 한국의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이 미국보다 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교분쟁이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이 조금만 세력이 더 컸다면, 한국은 아마 이슬람과의 분쟁 최전선에 섰을 것이라고도 한다. 인천시가 개신교계의 압력에 밀려 이슬람 문화원을 폐쇄하려고 하였던 일이나, 정부가 개정하려는 이슬람 채권법을 개신교계가 테러자금 유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국회 통과를 무산시켰던 일, 샘물교회 피랍 등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행위를 하다 발생한 빈번한

분란, 급기야 정부가 선교사들의 비자발급까지 제한한 일들은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가 갖는 근본주의적 성향을 잘 드러내준다.

보수개신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성시화운동이나 홀리클럽은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신교 네트워크를 확고한 정치·경제·사회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자는데 있다. 권력과 돈, 신앙은 이상한 흡착력이 있어 서로 끌어주고 당긴다. 세속적 욕망에 중세 칼빈의 신정국가적 비전을 엮어 모은 이 운동의 본질은 시장근본주의와 종교근본주의의 결합이다.

양대 근본주의의 결합을 통해 보수 개신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이 단기간에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다. 종교간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각 분야에서 배타주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사회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근본주의만이 판을 치는 사회 구조에서 종교근본주의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조선말의 봉당과 같이 한번 형성된 권력의 카르텔은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두터운 장벽이 되어 그것을 해체하자면 몇 배에 해당되는 시간과 역량소진이 불가피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개신교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 성향으로 보아 이는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다.

III.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세계화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1901~1978)는 인류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점점 더 균질한 세계로 빠져들면서 중국에는 하나의 문화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녀는 인류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자산을 획일화하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상상력 전체가 단 하나의 정신적·지적 모델의 한계에 갇힌다고 지적하였다.

종교 근본주의가 위협한 것은 다른 문화와 전통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훼손, 타종교에 대한 폄훼, 전통문화에 대한 극도의 배타적 태도 역시 획일화된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종교를 갖지 않은 한국인들 상당수가 문화 저변에서 기독교를 아직 주류종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도 이런 편협하고 배타적 태도 때문이다. 기독교가 급속한 교세증가의 시대를 접고 오히려 2천년대 들어 안티기독교운동 등으로 저항에 부딪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공통의 자산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얼마 안가 다 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전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화와 전통을 파괴한다면 이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 인류가 동일한 신앙, 동일한 관습과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배타적 근본주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이 점을 용기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런 것이 종교차별

###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유형 및 사례

- ▶ 종교차별적 인사
- ▶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 공공행사 관련한 종교 진흥
- ▶ 공공시설의 종교단체 특혜 대여
- ▶ 공직자의 종교적 언행

### • 인사관련 유형

-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인사와 관련된 이력서 등 공공서식에 종교란 기재행위

### •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

- 군대에서 교육, 훈련 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 군종장교의 경우 종교교리에 대해 강론할 수 있으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종교의식을 강제할 수는 없음
- 국립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전파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전파와 동일
- 공직 취임식에서의 종교의식을 하는 행위
- 공적인 행사에서의 종교의식은 원칙적으로 위헌. 다만 국가적 장례식 등 국민통합 등 세속적 목적과 관행이 있는 경우 종교의식 가능
- 보건, 교육 등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전파를 지원하거나 종교적 상징물 신축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진흥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
- 정치영역의 모임에서 종교적 이익과 관련된 약속이나 타종교에 대한 중

교적 비판을 하는 행위

- 제도적인 근거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에 대여하는 행위
-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일반인에게 특정 종교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동사무소 업무보고회를 특정종교 건물에서 하는 행위 등)
- 정책(공공)자료 제작 시 특정종교에 편중되는 홍보성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 공공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특정종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제외하는 행위
- 특정종교만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행정집행 행위 (특정종교 편중 예산 편성이나 지원, 위원회 구성 시 특정종교 인사위주 인선, 특정종교 관련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관련 제반 활동 (부대 공용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종교 관련 방송, 메일 송신 및 문서시행 등)

※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교관련 사적인 모임의 상호연락 등을 공용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안 될 것임.

•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

- 근무시간 내 특정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하는 종교 편향적 제반 언행
- 근무시간 내 사적 특정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 강제
-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군대, 검찰, 경찰, 교도소 등)가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수감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입을 권하는 행위

• **종교사립학교에서 행해지는 종교자유 침해 행위들**

- 종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교양수준 이상의 강제교육
-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대학 제외)에서의 수업시간 내 교사 등에 의한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

-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가능.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아침 저녁 조회 종례시 예배, 예불 미사 등 종교행사 참석 강요
- 정기적으로 전체 학생을 의무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나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당국의 행위
- 선생님이 찬송가를 틀거나 기도하며 식사하도록 하거나 성경구절을 읽어주는 행위
- 교회출석을 권유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수업과 상관없는 종교 구절을 읽어주며 메모를 강요 행위
- 학생회 임원이나 학급 임원의 출마 조건을 특정종교단체에 다니는 학생으로 제한하는 학칙
- 헌금 등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행위
- 십자가, 불상 등 종교 상징물을 교실에 설치하는 행위
- 세례, 수계 등 종교의식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타종교를 비방하면서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
- 특정 종교기관에 출석케하고, 확인서를 받아오게 하는 행위
- 종교과목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생활기록부에 교사의견을 수록하는 행위
- 종교를 이유로 교사의 진급, 간부임용을 차별하는 행위
- 종교관련 물품(책, 노래집) 미소지자에 대한 체벌, 구매 강요행위
- 교내에서 특정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위**

-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도행위
- 공공질서를 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평온권, 공공장소 이용권등)를

침해할 경우 제재가 가능(경범죄처벌법)

- 법원에서 경범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는 바, 대법원에서는 타인에 대한 침해 정도를 검찰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 따라서 타인의 수인 한도 내에서 일상적인 전도활동은 문제없음

## • 종교적 광고

-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광고에 특혜를 주는 행위
- 부작 위치와 공공성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진흥할 목적이나 결과가 되는 경우

## • 종교차별 제보기관

### ☞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01호 인권상담센터  
전화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전송 : 02-2125-9811, 02-2125-9812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mailto:hoso@humanrights.go.kr)

### ☞ 국민권익위원회

120-020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57번지 임광빌딩 신관1층 국민신문고  
전화 : 1600-8172, 1588-1517    홈페이지 :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전화 : 02-720-1994    [www.mcst.go.kr](http://www.mcst.go.kr), 국민마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화 : 02-2011-1824    전송 : 02-735-0614

###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번지 우리함께빌딩 3층  
전화 : 02-2278-1141    전송 : 02-2278-3532    이메일 : [kirf@kirf.or.kr](mailto:kirf@kirf.or.kr)  
홈페이지 : <http://www.kirf.or.kr> :  
홈페이지 메인 → 참여마당 → 제보 및 상담